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황
2면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3면

개혁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면

미국
대학생들의
점거
6~7면

이스라엘 좌파는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8~10면

전공의 파업
두 달
11면

노동운동

임금 인상 투쟁이
중요하다 16면, 15면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5면

국민연금 개악 시도 12면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다

관련 기사 6~7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마스에 협상을 제안한 것은 위기에 몰려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협상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인 인질 33명의 석방과 10주간 휴전 및 팔레스타인인 포로의 석방을 교환하는 안이다.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 제안은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다. 그렇기 는커녕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기를 반영한다.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라파흐 침공을 지연시키려 한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파흐 지상전을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으로 삼으려 한다. 도하 대학원연구소의 모하마드 엘마스리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확전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이 라파흐 침공을 승인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군사적으로 만회하려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인질을 구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마스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승리의 증표로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

“더 냉소적으로 보는 다른 관점이 있는데 … 이스라엘의 최종 단계는 가자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대(大)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다.”(알 자지라, 4월 21일 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협상을 가로막은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압박도 넣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인질들을 되찾은 다음에 가자지구에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이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귀환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튀르키예 국영 통신사 아



해안 도로 따라 가자 북부로 돌아가는 피란민들. 이스라엘은 이런 귀환 행렬도 공격하고 있다

나돌루 아잔시, 4월 21일 자)

실제로 4월 1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려던 피란민 수천명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가자지구 북부는 여전히 전쟁 지역이며, 이스라엘군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올렸다.

이스라엘 극우파는 휴전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집트 휴전 안에 합의하면 굴욕적인 항복이 될 것이며 … 네타냐후가 항복하고 라파흐 공격 명령을 거둔다면 그가 이끄는 정부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재무장관 베잘 펄스모트리치)

이스라엘군은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라파흐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배치했고 공중 폭격을 퍼붓고 있다.

“지속 가능한 평온”?

만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합의되더라도 그것이 항구적 휴전(“지속 가능한 평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와 중대위협프로젝트(CTP)에 따르면, 미국은 4월 1일과 18일에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라파흐에서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자신들이 용인할 수 있는 라파흐 공격의 수위를 공개했다.

블링컨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4월 19일)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라파흐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제한적”이거나 “점진적”인 공격은 지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의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라파흐를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내놓은 유일한 민간인 보호 대책은 12인용 텐트 4만 동을 구입한 것이었다.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피한 민간인들에게 피난처 뿐 아니라 물·음식·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협상을 압박한 것은 민간인을 털 죽이는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다.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더라도 하는 양 위선을 떠는 것에 어떤 기대도 걸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동기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마스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던 4월 18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거부했다. 미국의 “두 국가 방안”이 얼마나 헛된 약속인지를 보여 준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호세프 보렐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은 — 그런 일[라파흐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

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란도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을 재개할 요량으로 4월 셋째 주 뉴욕을 방문했다. 이란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을 미국과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부활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됐다가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파기됐다.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국제적인 연대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일 매일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이를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으로의 확전을 시도한 것도 가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미국·영국·유럽이 확실하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일 테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제한적 대응은 이스라엘의 취약성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어자”로 보이도록 국제 여론을 반전시키려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의 나세르 병원과 알시파 병원에서 발견된 시신 집단 매장지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와 전쟁 범죄의 잔혹성을 다시 환기시켰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은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4월 18일부터 서안지구 북부 툴카람시(市) 인근의 누르 샴스 난민촌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14명을 살해하고 수배자 15명을 체포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장 투쟁과 총파업으로 대항했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툴카람여단은 50시간 넘게 이스라엘 군과 전투를 벌여, 이스라엘 군인 9명과 국경 경찰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4월 21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져 서안지구 내 상점과 은행, 학교 등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됐다.

김인식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의의를 뒀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윤석열은 '쇼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급전쟁을 벌이겠다는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벌써부터 공공요금 인상, 연금·노동 개악 등을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총선 때 '대파 소동'을 치르기도 윤석열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재정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고 5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을 올리려 했다.(그러나 반발이 두려워 인상을 4월 29일 일단 연기했다.)

여권 재편도 권력 누수를 막을 친위 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진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경찰 정보라인 출신인 이철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하려 한다. 둘 다 원조 윤희관이다. 4월 29일 여당 새 비대위원장에 이 둘과 가까운 황우여가 지명됐다.

회담 후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쇼통[을 이어 나감] 필요성에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자로서 국정(지배계급의 정치다!) 운영에 책임성을 발휘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지자들에게 개혁 염원을 대변하는 모습도 보이려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이 영수회담을 환영한 것은 이재명의 이런 책략을 용인하는 것이었다.(회담 종료 후에는 그저 윤석열을 규탄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런 책략은 지배계급을 현혹시키거나 윤석열을 곤란하게 하지는커녕 자기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급 적대를 무디게 만들 뿐이다.



이재명은 국정 운영에 책임성을 발휘하는 것과 개혁 염원의 대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트로츠키는 일찍이 이런 책략(소위 '화전양면'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계급은 속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이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특히 지배·유산·착취·교양 계급에는 즉각적으로 들어맞는 얘기다. 그들의 세계적 경험은 풍부하고, 계급 본능은 정확하며, 휘하의 정보기관들은 다양하다. 그래서, 마치 판 사람인 척하며 그들을 속이려 든다면 실제로는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게 되고야 만다.”

마치 윤석열 퇴진을 말하면서도 영수회담을 환영하는 개혁(개량)주의 지도자들을 겨냥해 쓴 듯하다.

이재명은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는데, 윤석열의 의대 증원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고 의사들의 반발은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식 의대 증원 계획도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잘못이다.(두 당은 그저 증원 규모만 달리할 뿐이므로 이런 지지는 이 문제에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에게 출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개악에 협조하겠다고 이재명이 말한 것이다. 물론 국회 연금특위가 제안한 두 방안(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중 국민의힘은 후자를 선호하고, 민주당(과 개혁주의 단체들)은 전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이로운 게 없다. 전자의 안은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가까이 인상해야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다. 두 당이 연금 개악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방안보다도 더 나쁜 안으로 절충될 공산이 크다. 전세사기특별법처럼 말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자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윤석열 탄핵 추진을 공약한 것을 무색케 하는 제안이었다.

시간 낭비

노동운동과 좌파는 노동계급을 혼란시킬 뿐인 영수회담을 환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를 이용해 생계비 하락에 저항하는 투쟁을 이끌려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침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유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진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우파가 반격을 개시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했다.

민주노총 상근간부 다수와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공조로 개혁입법도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도 다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때조차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전략을 구사해 개혁입법을 약속하고 대단찮은 실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 인정받아 집권당이 되려는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민의힘보다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지배계급에 호소한다.

그래서 우파 정부에 맞설 때조차 일관성이 없고 자주 노동계급의 뒤통수를 쳐 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이런 배신을 소수파 야당인 탓이라고 핑계를 댔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다수파 여당이었는데도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개악을 추진했다. 그러고는 그때의 개혁 배신이 검찰을 앞세운 적폐 세력의 탓이었다고 또 핑계를 대고 있다. 180석 가까이를 가졌던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이었는데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배신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묵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야 기업주들이 반대한 노조법 2·3조 개혁(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입법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개혁적이라는 외양을 얻어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노동운동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원안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압력에 순응했고, 따라서 독자적 계급투쟁도 벌이지 않았다.

이처럼, 계급 협력은 지배계급 측의 협력 파트너를 위해 노동자 운동의 고유한 요구와 전투성을 제한하게 만든다.

민주당을 이용해 개혁입법도 하고 좌파의 입지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노동운동의 투쟁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진보'로 색칠해 주는 효과를 내며) 좌파 정당들 자신의 기반도 잠식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개혁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그런 노선을 앞장서 추진했던 정의당은 이번에 의석을 전부 상실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이 뜨는 상황에서 선거연합을 해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금야금 계속 배신을 때릴 것이다. 가끔 반전 시도로 잃은 점수도 만회하려 하면서 말이다.

민주당이 노동계급에 이로운 개혁보다 자본가의 이윤 지키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 노동계급 대중으로부터 불신받는다면, 이번에 진보당의 성공을 보장해 준 전략은 그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선거적 대안(세력 연합) 모색이 아니라 생계비 저항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문성

개혁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일봉

2008년 공황 이후 15년 넘게 경제의 침체와 부진이 거듭되면서 근래에는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충돌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 위기가 어찌면 갑작스럽게 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소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준석 같은 자들도 개혁을 외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분열했다.

중간계급의 다수도 개혁과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총선에서 지지했다.

노동계급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과연 개혁 요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사회민주주의가 한창이던 20세기 초 쯤 몇몇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최소강령'파와 '최대강령'파로 날카롭게 분열해 있었다.

최소강령은 자본주의의 한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개혁(요구)들의 묶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반면 최대강령은 자본주의를 제거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개혁(요구)들의 묶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최소강령파는 혁명은 불필요하고 개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분파였다. 후대의 용어로 '개혁주의자'(개량주의자)들이었다.

최대강령파는 개혁이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오직 혁명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그들은 순수주의자들이었다. 노동조합 투쟁과 개혁입법이 노동계급에게 권력 장악이라는 과업을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수단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대강령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개혁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전복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지금까지 제출돼 온 요구들은 다 최소강령이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끌던 초기 코민테른(국제 공산당)은 "최소강령"이라는 사회민주주의의 용어를 피하고 "부분적 요구들" 또는 "즉각적 요구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부분적 요구들" 또는 "즉각적 요구들"을 대부분 지지해야 한다고



과연 개혁 요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위)

강조했다. 그 요구들을 쟁취한다면 "노동계급과 여타 피차별 사회집단들의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적 요구들" 또는 "즉각적 요구들"이 성취됐을 때, 개혁으로 자본주의가 안정화된다는 문제는 어떤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대중 파업에 밀려 불가피하게 양보한 독재 체제의 이후 개혁 조처들은 당시 한국 자본주의를 구했다.

1997년 말 IMF를 불러들인 경제 공황 속에서 김대중이 집권해 1960년대 초 이래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당시 한국 자본주의가 소생할 기회였다.

이처럼 개혁이 노동계급에 권력 장악을 준비시키고 교육시키는 수단이면, 서도 자본주의의 안정화 효과를 낸다면, 혁명적 좌파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진정한 개혁과 유사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먼저, 부분적/즉각적 요구들 가운데 (진정한) 개혁과 유사 개혁을 구분해야 한다. 개혁은 착취와 차별과 억압을 완화하는 것이다.

반면 유사 개혁은 흔히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개혁이다.(그러므로 유사 개혁은 흔히 자본주의의 안정화 효과를 내는 개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재벌 개혁 또는 재벌 체제 해체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핵심 문제이지만, 설사 이례적인 경우에



투쟁으로 진정한 개혁을 쟁취한 19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위)

인민전선 전략은 진정한 개혁을 가져올 수 없다(아래)

가능하다 해도(가령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맥아더와 리지웨이의 미군정 하에서 시행된 일본 재벌 해체)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개혁일 뿐이므로 유사 개혁이다.

사회연대임금, 즉 정규직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그 돈을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돌리게 하자는 것도 유사 개혁이다.(그런 요구를 제출하는 운동은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공상적 개혁주의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금속노조의 당시 지도부는 저가(低價) 철강재 수입 규제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유사 개혁 요구였다. 한일 노동자들이 서로 소원케 하거니와, 두 나라 노동자들이 자국 사용자와 일체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애국적 대책이다. 노동계급 국제주의에 정면 위배된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 개혁" 강령에는 재벌 개혁

이 포함돼 있고 이 요구가 사실 가장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인민전선(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 전략도 민주노총의 "사회 개혁" 강령에 포함돼 있다. 인민전선은 "시민"과의 연대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는데, "시민"은 중간계급(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가리키는 암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인민전선 전략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상근간부층 다수파에 기반을 둔 진보당이 민주당의 (준)위성 정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부 나타났다. 물론 소상공인과 그들이 속한 중간계급은 노동계급의 적이 아니다.

하지만 중간계급과의 전략적 동맹은 노동계급의 고유한 이익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가령 노동계약의 핵심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이 취한 태도는 명목상의 반대에 불

과했다. 즉, 말로만 반대한다고 할 뿐, 행동은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어떤 요구는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유사 개혁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개혁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개혁들 가운데는 (착취와 차별과 억압을 완화하는) 진정한 개혁과 (자본주의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내는) 유사 개혁으로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고 두 가지 성격이 통일된 모호한 개혁들도 적지 않다. 당장에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 자체도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이다.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개혁(들)을 쟁취해 낸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을 쟁취한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 발전(비록 불균등 발전을 나타내겠지만)이 지배자들의 지배 전략과 이윤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쟁취했을 때 그 개혁들이 모두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도 없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전과 달리 그 이후는 경제 위기가 빈발하는 시기이거나, 특히 2008년 이후는 대침체기이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장애물이 됐고, 역사적으로 끔찍하고 가망 없어서 절망만을 안겨 주는 사회 체제가 돼 버렸다.

이런 시기에는 지배자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전에 양보했던 개혁들조차 회수해 가려 애쓴다.

물론 오늘날에도 대규모로 싸우기만 한다면 일부 개혁은 얻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16~17년 촛불 운동이 성취한 박근혜 정부 퇴진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 정치에 만연한 부패에 맞선 민주주의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즉각적 요구만 갖고 싸워서는 사회를 제대로 바꿀 가망이 없다.

개혁주의적 대중 행동에서 혁명적 대중 행동으로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대중 행동이 사회 혁명을 지향하는 대중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때는 최소강령을 넘는 특수한 강령이 필요하다. 트로츠키는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통합되는 연속혁명에 상응해,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을 잇는 교량적 구실을 하는 강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혁명기가 아닌 시기에도 그런 강령이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강령(요구들의 묶음)을 그는 “전환적 강령” 또는 “대중 행동 강령”이라고 불렀다.

어떤 좌파들은 이를 ‘이행기 강령’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는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레닌과 트로츠키에게 “이행기”는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고부터 계급이 사라질 때까지, 즉 노동자 국가 시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적 요구들은 노동자 혁명 성공 전에 노동자들이 하는 개혁주의적 대중 행동이 혁명적 대중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 요구들을 뜻한다.

트로츠키가 “때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붙인 시기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력 장악이라는 생각을 황당하다고 일축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노동자들의 정서가 고양되는 때를 말한다.

물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불가피하게 지금은 즉각적 요구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흔히 개혁주의자들과 공동으로) 활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개혁주의자들이 개혁 투쟁을 이끄느냐 아니면 혁명가들이 개혁 투쟁을 이끄느냐 하는 점은 실제로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위기가 구조적이고 하도 심각해 부분적 또는 즉각적 요구도 쟁취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투쟁 과정에서 때때로 소수 노동자들이 혁명적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소수가 리더십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소수를 조직하는 것을 트로츠키는 “간부의 시초 축적”이라고 불렀다.

“시초 축적된 간부”들이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대중 급진화 시기에 대중 행동 속에서 전환적 강령과 함께 제 묶음을 할 때 그런 대중 행동이 비로소 혁명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1917년 2월 혁명 이전 시기의 볼셰비키 당이 바로 “간부의 시초 축적”을 나타냈고, 그들이 집약한 러시아 노동자·병사·농민의 요구들인 “빵, 토지, 평화”가 바로 그런 전환적 강령이었다.

지금, 복합 위기의 시기에 바로 “간부의 시초 축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로미오 사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집중 행동의 날 미국 대학생 점거에 고무되다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 Free free Palestine!(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여 독립하라!)”

4월 27일(토)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은 바이든 정부의 진압·체포 작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구호로 시작됐다.

내외국인 수백 명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를 가득 메웠다. 주한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 인사동을 누빈 행진 대열은 500여 명을 넘어섰다. 투지도 넘쳤다.

팔레스타인 현지 상황의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생 시위 소식에 고무됐기 때문이다.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전투성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 강력한 영감과 용기를 준 것은 한국의 운동이 글로벌 연대 운동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웅변한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심 씨는 미국 대학생들의 저항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희망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하는, 또 점점 더 많이 집회에 참가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김태양 씨는 미국의 위선을 폭로했다.

“경찰들이 전기충격기와 곤봉으로 학생들을 공격하는 광경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그 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학살을 벌여 온 이스라엘에 36조 원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한 이집트인 유학생 아부 씨는 인종학살자보다 더 크게 단결하자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시건·캘리포니아·하버드·예일 대학교를 넘어 전국의 대학들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시앙스포 대학 학생들도 연대해 점거에 돌입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결코 우리의 투지와 연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의 이성일 수석본부장은 최근 대의원 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결의문을 채택한 일을 알리며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집회 후 행진은 거리에서 환대를 받았다. 행진을 촬영하고, 박수 치고, 팻말을 받아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었다. 인사동 편의점에서는 한 한국인 중년 여성이 외국인 행진 참가자들의 생수 값을 대신 지불했다. 행진 주변에서 리플릿을 나눠 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의 호의적 반응에 고무됐다.

고무된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도로에 도착해 10분 넘게 쉽없이 구호를 외쳤다.

김문성

웹사이트에서 축약되지 않은 취재기 전문과 더 많은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다.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애틀랜타의 컬럼비아대학교를 출발점으로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전 시위가 남부 텍사스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서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등에 이르기까지 75곳이 넘는 대학교로 번지고 있다(4월 28일 현재, 이하 현지 시각).

학생들은 인종 학살 중단, 휴전,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개최 보장,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업체와의 거래 중단,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등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점거·집회·야영·단식 등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전쟁을 막아 달라고 바이든에게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다(많은 언론 보도와 달리). 그렇기는커녕 학생들의 행동은 가자 전쟁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역겨운 위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대학 당국과 경찰은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 1000여 명이 체포됐다.

바이든 정부는 시위를 막으려고 심지어 오하이오주립대학교와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했다.

그러나 탄압은 운동을 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점거의 진원인 컬럼비아대학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은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강의 도중에 항의의 표시로 교실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4월 17일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은 텐트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총장 네마트 샤피크가 경찰에 농성을 해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컬럼비아대학교와 바너드대학을 침탈해 학생 시위대 108명을 체포했다. 그들 중에는 일한 오마 하원의원의 딸 이스라 히르시도 있었다. 일한 오마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을 비판해 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천막 농성



사진 출처 @GeogSara (X 및 트위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다

김인식

민주당 좌파 의원이고, 히르시 자신도 기후 운동에 참가해 온 학생 활동가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는 1968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체포된 학생들은 풀려났지만 대학 당국은 그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대학 교정 한복판

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백 명의 컬럼비아대학교 노동자가 학생들에게 연대하며 업무를 중단했다. 지역 주민들도 학생들의 시위에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 교수들은 경찰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공격한 것으로 여긴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회는 샤피크 총장이 경찰을 불러 학생들을 진압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당국과 경찰은 탄압으로 운동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고, 운동은 오히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의 캠퍼스 행동은

가자 전쟁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역겨운 위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 뒤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연대 행동의 물결이 일었다. 노스캐롤라이나·보스턴·오하이오·하버드 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집회와 점거가 즉시 조직됐다.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대학 당국에 요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예일대학교에서도 시위 참가자 45명이 체포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불안정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이... 이스라엘-가자 전쟁에 여러 방식으로 항의하며 대학 생활을 뒤흔드는 첨예한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4월 19일 자)

미국 밖에서도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에 연대하는 입장들이 발표되고 있다. 동예루살렘과 독일 등지의 학생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인 연합’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의 컬럼비아대학교 동지들과 연대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계속 탄압하는 상황에서 삼인조(교내 시온주의자들, 대학 당국, 뉴욕시 경찰청)의 공격을 견뎌 내고 있는 ‘가자 연대 농성장’의 동맹들을 우리는 지지한다.”

프랑스·튀르키예·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대학교들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프로파간다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백악관이 개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학생 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다.

백악관 부대변인 앤드루 베이츠는 23일 이렇게 말했다. “폭력과 신체적 위협, 증오, 유대인 혐오 주장을 목도했을 때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규탄할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 7면으로 이어짐

▶ 6면에서 이어짐

직접 나서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유대인 혐오 광기”라고 비난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무리가 미국 주요 대학을 장악했다. ... 이런 현상은 1930년대 독일 대학에서 벌어진 상황을 연상시킨다.”

트럼프도 시위대에 ‘유대인 혐오’라는 혐의를 씌웠다. 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심지어 주 방위군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유대인 혐오’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 중에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이 많다. 컬럼비아대학교 역사학과 학생 리스파다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시온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늘 이 대학교를 갈라놓는 쟁점이 돼 왔습니다.”(《워싱턴 포스트》 4월 19일 자)

오히려 시온주의자들이야말로 경찰과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시위대를 도발하고 있다.

올해 1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적어도 두 명의 남성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악취가 나는 화학 물질을 뿌렸다. 가해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 또, ‘휴전을 지지하는 유대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스스로를 혐오하는 유대인”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의 공격으로 최소 학생 3명이 치료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알자지라》, 1월 23일 자)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과 평화로 염원하는 유대인의 목소리’는 가해자들이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재학생이자 이스라엘군(IDF) 전역자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두고 “1968년 반전 운동의 유령이 돌아왔다”(《뉴욕 타임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비드 팔룸보-리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도 다음과 같이 썼다(《알자지라》, 4월 13일 자).

“10월 7일 이후 몇 달 동안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미국 대학교 전반의 풍경이 바뀌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학생들의 반전 운동과의 유사점을 비교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학생 신문은 2000명 넘게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이렇게 보도했다. ‘이 정도의 참가자 수는 1960~1970년대 베트남



프랑스로 확산된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시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

전쟁 반대 학생 시위 때도 드물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학생이었고 그 당시 시위와 오늘날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몇 가지 분명한 유사점에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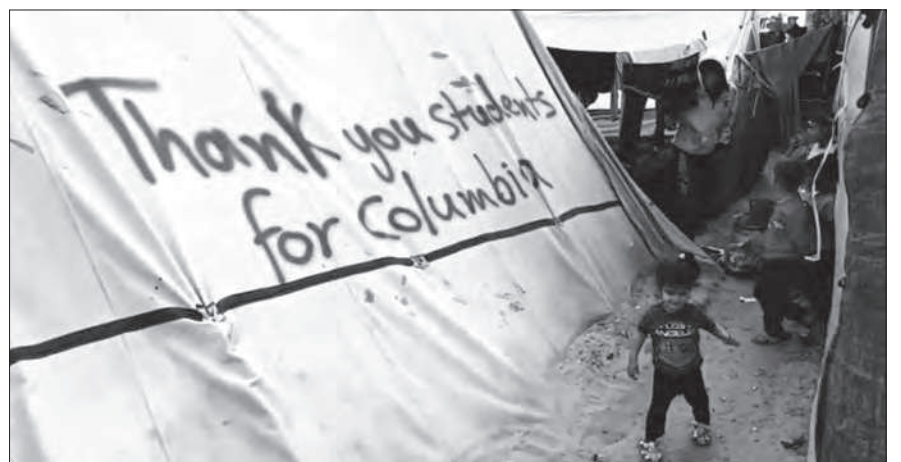
“첫째,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의 항의는 주류 언론의 전쟁 보도와 대학 당국의 공식 입장에 도전했다.

“둘째, 이런 항의 시위들은 베트남 해방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투쟁들을 국내적·국제적 투쟁들에 맞춰 조율했고, 지역적·전국적·국제적으로 동시에 연결된 광범한 다인종적·다민족적 연합의 특징을 띠었다. 이런 연결이 뜻하는 바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 단체들도 혈혈단신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운동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중요하고 인상 깊은 차이점에 놀랐다. 미국 대학생들은 자신들 개인의 삶이 베트남 전쟁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봤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친구를 잃었고, 우리 중 일부는 운동에 힘쓰기 위해 징집이나 연방 정부의 조사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숨겨 줬다. 베트남 사람들과의 연대감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가자지구의 인종 학살과 서안지구의 인종청소에 대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미국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대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연대감·공감·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종청소를 미국이 촉진해 왔다는 점에 분개한다.

“비판적 인종 이론,’ ‘다양성,’ ‘포용’



라파흐 난민촌에서 전해 온 인사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

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유대인 혐오’라는 비난으로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는 것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

스 행동을 지지하며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건설에 더한층 매진하자.

우리도 미국 대학생들처럼 외치고 행동하자. “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며, 독립하라!”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장,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가입하세요

ws.or.kr/join



기본입장



이스라엘 좌파는 팔레스타인 해방에 한몫을 할 것인가

이 기사는 4월 2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이스라엘 좌파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까?'(QR코드로 영상 보기)에서 롬 퍼거슨이(사진)이 한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롬 퍼거슨은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해왔다. 퍼거슨은 영국 전쟁저지연합 전국 운영위원이자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 활동가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정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민간인 학살이 실시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자지구의 인종 학살을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핵심부의 정치인들, 주류 언론들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생겨났습니다.

냉전 종식 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주의와 민족 자결권 수호라는 미명하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개입하고,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을 연거푸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명분이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자지

구에서의 인종 학살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들은 국제법이나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허울도 벗어던질 태세가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저항이 직면한 물음은 ‘어떻게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을 특정한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의 제목, 즉 ‘이스라엘 좌파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까?’ 하는 물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 물음은 지난해 1~10월과 최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된 시신들

시온주의 프로젝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내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전기·식량·연료 무엇 하나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과 싸우는 중이니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노동당식 시온주의 전통의 정치인이자 이스라엘 대통령인 아이작 헤르조그는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당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민족 전체가 책임이 있다. 민간인들은 몰랐다가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 ‘유대인의 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경에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는 자는 그게 누구든 머리에 총알을 박아 줘야 한다.”

이스라엘 주요 방송사의 한 기자는

이스라엘군이 초장부터 팔레스타인인 10만 명을 죽였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종 학살을 부추기는 이런 언사는 권력 핵심부의 정치인과 주류 언론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의 70퍼센트가 가자지구에서 구호 물자 반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화력을 너무 아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8퍼센트였습니다. 37퍼센트는 지금 정도 화력이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나친 화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의 3분의 2는 군대가 없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좌파’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80년대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지금의 위기

이 물음에 답하려면 지금의 인종 학살이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이스라엘 식민 정착자 사회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봅시다. 가자지구에서 끔찍한 인종 학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병원이 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이 집단 매장한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 명이 있는 라파흐를 지상군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이란은 보복 공격을 했

습니다. 이는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이 뚜렷했습니다. 여기서 네타냐후는 분명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학전 행위는 서로 연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두 행위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핵심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을 기초로 정착자 식민 사회를 세우고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지키는 요새 구실을 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진 출처: Advestills



사진 출처: Itamar Ben Gvir

(위) 지난해 12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파괴하는 이스라엘군
(아래) 국우이자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그비르가 경찰 산하 민간인 부대에 총기를 지급하고 있다

에 반대해 수십만 명을 거리에 동원한 '피스나우' 운동은 쇠락한지 오래입니다.

2022년 이스라엘 의회 선거에서는 국우인 '종교적 시온주의당' 등이 참여한 선거 연합이 돌풍을 일으켜 선거 정치의 변두리에서 핵심부로 진출하고 네타냐후 연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건국의 주도 세력이자 30년 넘게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 그 밖의 국가기구를 주도했던 노동당식 시온주의자들은 4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오늘날 '두 국가 방안'과 가장 자주 결부되는 '시온주의 좌파' 정당인 메레츠는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인종 학살과 인종 학살적 이데올로기의 역학은 그저 10월 7일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민간인 사망에 대한 광기 어린 보복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학의 근원은 시온주의 프로젝트와 이스라엘 사회 자체에 있습니다.

정착자 식민 지배

이스라엘 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의 물질적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유대계 이스라엘인은 팔레스타인인에게서 빼앗은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폐허 위에 지은 집이나, 1948년 '나크바'로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에 삽니다.

처음부터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에 기초한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나름의 고유한 특성도 있습니다.

시온주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알제리에서의 정착자 식민 지배 사례와 비교될 때가 많은데 그런 비교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남아공에서의 아파트헤이트는 소수인 백인들이 압도 다수인 흑인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것에 기초한 지배 체제였습니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정착자 식민 지배 체제는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는 수단이었고, 프랑스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과 배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자들은 정착자 국가의 생존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서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1948년의 "나크바"였습니다.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인종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은 "나크바"를 1948년에 완료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탈과 인종청소 과정을 일컫는 말로 씁니다.

이스라엘 국가에는 또 다른 핵심적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요새 구실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국 제국, 1948년 이후에는 프랑스,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지원 속에서 그런 구실을 수행했습니다.

우경화 궤적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정착자가 급증한 것은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상하고 유대인 박해, 특히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착자들 다수의 동기가 무엇이었든간에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식민 지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노동당식 시온주의는 새 국가의 군사적·경제적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을 제공했습니다. 노동당식 시온주의는 당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부합했습니다. 국가가 산업·토지·자산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배분하는 것이 국가를 수립하는 데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농업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키부츠는 사실 새 국가의 영토를 구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는 군사적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노동당식 시온주의는 이스라엘 정착자 식민 지배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지주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성숙하고 경제·사회적 토대가 발전하자, 노동당식 시온주의의 기초를 이루던 기구들도 변화하고, 노동당식 시온주의 자체도 뒤쳐진 것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경제는 미국



사진 출처: Itamar Ben Gvir

2023년 이스라엘 우익 집회를 이끌고 있는 국가안보부 장관 벤그비르

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자본 축적의 주요 중심을 구축했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투자를 발판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노동당식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좌파'가 몰락한 한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이 분출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온주의의 인종차별적 논리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세력이 힘을 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67년 중동 전쟁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추

방(완곡어로는 "이주")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는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유대인 정착자의 수와 거의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무장 저항이 전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해 PLO를 분쇄했다고 믿었지만, 불과 몇 년 후 제1차 인티파다가 분출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소국가라는 신기루를 쫓는 고분고분한 PLO를 데리고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고, 이스라엘은 그 협정이 제공하는 위장막 아래에서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크게 확장해 그곳을 잘개 쪼개고 그곳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2000년 제2차 인티파다가 분출했고, 2005년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잇따라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서안지구에서도 끊임없이 저항이 분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당국(PA)을 협조자로 두고,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인종 분리 장벽을 세우고, 하마스와 PA의 싸움을 부추기고, 무엇보다도 아랍 국가들과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8~2019년 가자지구 국경지대에서 '귀환 대행진' 운동이 벌어졌고, 무엇보다 2021년 5월 '단결 인티파다'가 일어나 사상 처음으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단결해서 저항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강탈과 점령의 현실이 끊임없는 저항을 낳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인은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제2차 인티파다의 한 장면

에 남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게 된 팔레스타인인도 저항에 나선 것이죠.

그럼에도 네타냐후는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잠재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저항은 PLO나 하마스와 같은 특정 운동이나 특정 단체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저항은 팔레스타인인을 상

대로 한 강탈이 지속되는 현실의 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정착자 식민 지배 사회에 항구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제2차 인티파다 이후 극우가 이스라엘에서 부상하고, 2021년 '단결 인티파다' 이후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가 돌파구를 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

장 우익적인 연령층은 18~24세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우익 집회에서 출판물을 벌이고 "아랍인들에게 죽음을!"이나 "너희 마을이 불타기를!"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인종차별과 폭력성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우경화 궤적을 밟아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쟁취할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들을 살펴보고 그 시위들이 무엇을 반영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일단 그 시위에는 팔레스타인인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자 식민 지배 사회가 세속 대 종교, 또 사회적·정치적 노선에 따라 분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착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입되는 과정에서, 식민 정착자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과 이득의 배분을 두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충하는 이 집단들을 규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강탈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시위들은 결코 전쟁 반대 시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는 하마스와 포로 석방을 협상하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용기 있는 개인과 소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것이 자극할 아랍 대중의 투쟁이 중요하다

의 단체가 있습니다. 비록 그중 다수는 '두 국가 방안'으로 자신의 전망을 한정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착자 식민 지배 사회 구조가 존재하는 한 그들이 결코 실질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온갖 참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967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팔레스타인인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은 중동 전역에서 아랍 정권들과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모으는 피뢰침 구실을 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거 학살할 수 있지만, 하마스를 궤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극우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완수한다는 꿈을 실현하지 못할 공산이 큼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벌여 온 정착촌 확대와 군사 점령을 아무런 저항 없이 가자지구로 확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공식 병합한다면 그것은 유대인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위기인 것이 아닙니다. 아랍 국가들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자 식민 지배 사회 내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쟁취할 주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식민 정착자 국가도 그

내부로부터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역사적 순간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을 흘깃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정착자 식민 지배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 그 해법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아이비리 그 대학 캠퍼스에서도 점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랍 대중의 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흥해도 제국주의 질서의 요새로서 흥하고, 망해도 제국주의 질서의 요새로서 망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제국주의의 피뢰침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가와 반제국주의자들의 임무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 일조해서, '요르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역 천경록

웹사이트에서 발제자의 토론 정리를 함께 볼 수 있다.



전공의 파업 두 달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 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파가 당선된 의협도 협상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학병원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이어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 등 진료 축소를 이어 가고 있다.

수술과 진료 예약이 연기된 환자와 보호자들은 그동안 의지해 온 의사 개인들과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마저 들 것이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병원에서 급히 수술 예약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불안감뿐 아니라 배신감도 들 것이다.

당장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노동자 등 서민층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뿐 아니라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막겠다며 수가 인상 타령만 늘어놓는 의협 등을 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왜 젊은 의사들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은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장차 노동자 등 서민층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한숨만 나온다.

어떤 노동자들은 또 다른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유보했다. 이제는 오히려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정부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했던 적이 있던가. 파업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일대일로 대



슬금슬금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이재명은 퇴로 만들기 급급

화를 하자며 손을 내민 적이 있던가.

소수의 노동자들은 이를 보면서도 적극적인 교훈을 이끌어낼 것이다. 싸울 때는 전공의들처럼 ‘생명’ 운운하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는 점 말이다.

그러나 더 많은 노동자들은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듯하다. 의사들은 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고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노동계급의 일부

그러나 정부를 일부 물러서게 한 것은 의협이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아니라 전공의들이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전공의들은 그들이 미래에 어떤 전망을 갖고 있건 간에 현재 노동계급의 일부다. 대학병원에 집단적으로 고용돼 있는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핵심적 구실을 해 왔고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그 힘을 보여 준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전공의들의 다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약속받고자 반동적인 요구를 내걸고 있다. 이준석 같은 일부 우파만이 이런 요구를 지지하고 이용하려 할 뿐이다.

한편, 중소병원 개업의들이 주도하는 의사협회는 강경한 언사를 쏟아 내기는 해도 실제로 가진 힘은 별로 없다. 그들에게 파업은 정부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부담이 된다.

대학병원 교수들로 보자면 그중 일

부는 사실상 병원 경영진의 일부이고, 다른 일부는 중간에 끼인 존재로 약간의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사직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이들은 전공의들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좌파와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전공의들이 의협이나 교수들과는 독립적으로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한국 의료 체계의 핵심적 문제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의료를 시장에 맡겨 뒀서는 그 주된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이른바 필수의료를 우선하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의사들이 돈

만 좇는 것은 아닐 지라도 시장 의료 하에서는 필요보다 이윤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필수의료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한국 의료 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 그들 자신이 의료 시장을 내맡겨 왔고, 의료 이윤 증대와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의료 계속 시장화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전공의들을 달래겠다며 한담화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료 시장화로 의사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공공의료 강화에 매우 소극적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조차 단 한 곳도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며 제출한 법안들은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설사 시행되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냉소만 낳을 것이다. 지금도 이재명은 의대 증원 규모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한다.

수십 년에 걸쳐 자리잡고 성장한 시장 의료 체계를 개혁하려면 한국 자본주의의 소유 관계를 뒤엎을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전공의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그런 변화의 중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subs2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8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강동훈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트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퍼센트를 유지하는 2안이 그것이다. 이 중 1안이 56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기기', '기금 고갈' 등을 부르짖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두 안 중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안에 찬성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며 국가가 노후 생활을 책임을 져 주길 바라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퍼센트로, OECD 평균(14.3퍼센트)의 2.8배나 될 정도로 최악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면 노동자 개혁 의지가 꺾이게 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지출 규모가 3.7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기 때문이다(2020년 기준).

이번에 채택된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생애 월급 평균이 300만 원(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사람은 (예상 평균 납입 기간인 27년 납입을 전제로 했을 때) 국민연금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다.

여전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납입 기간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연금은 이조차도 못 될 것이다.

우파들은 이 정도 증액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앞으로 30년 후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마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양 협박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만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금이 쌓이다가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시장주의라는 문제점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예정돼 있던 것이다. 이미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채택된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려도 기금이 거의 고갈되는 2060년에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13.5퍼센트에 그칠 것이다. 이는 2013~2015년에 유럽연합(EU) 28개국이 GDP의 11.3퍼센트를 연금 지급에 사용한 것과 비교해도 대단한 수준이 아닐뿐더러 2060년 유럽연합의 연금 지출 예상치 평균인 13.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그때쯤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유럽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기금 고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이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면 노동자들(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는 방안도 개악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수안으로 채택된 방안도 노동계급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44퍼센트(소득의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나 오르기 때문이다.(반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25퍼센트만 오른다.)

300만 원 부급 생활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사용자가 절반 부담을 한다고 해도) 13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월 6만 원이나 늘어난다. 개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2만 원이나 오르는 것이다.

지금 노동자 등 서민층 대다수는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불안정·저임금 노동으로 근근이 먹고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 보험료가 수만~십수만 원 늘어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불행히도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녹색정의당 등 주요 개혁주의(진

보) 단체들은 모두 이번 보험료 대폭 인상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초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진 1안과 2안이 모두 보험료 대폭 인상안이었던 것도 이 단체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양대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녹색정의당 등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뿐 아니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후 보장성이라는 ‘국민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도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하거나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 복지를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요구하는 데 자기 제한이 생긴다.

그러면, 연금의 재원을 어느 계급으로부터 거둘 것인지 하는 진정한 문제가 흐려지게 되고,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을 위해 투쟁에 나설 의지가 꺾이게 된다. 자기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올리라고 투쟁에 나설 노동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중시하지 않게 되면, 개혁주의 단체들이 애초에 목표로 한 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제가 지지부진해 자본가들이 좀체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 보장성을 조금 올리느니, 보장성을 낮추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자랄 수 있다. 노동자

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노동자 중 어느 세대가 고통을 더 져야 하는지 등의 기회주의적 생각도 자라나기 쉽다.

실제로 우파들은 이미 이 점을 노리고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고 이간질에 나서고 있다. 4월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더한층의 개악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의회 협상을 중시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개혁 동력을 일궈 낼 수 없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높이라며 싸워야, 단결해서 대규모로 싸울 수 있고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난민의 경우 장기 구금되곤 한다.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보호소 내 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이주민을 괴롭히는 일도 다반사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이러한 억압적인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때때로 항의를 벌였다. 보호소 바깥의 연대 단체들은 이런 소식을 파악해 꾸준히 공론화하고 정부에 항의하며 때로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덕분에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모로코인 난민에게 '새우깡'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고 공분이 일었다. 이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어졌다. 이런 항의와 캠페인 덕에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은 여러 통제 조치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라, 구금된 이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한계가 너무 많다.

개정안은 구금 기간 상한을 1년 6개월로 둔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을 구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저 행정적 위반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소 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 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한다.(헌법재판소 결정문)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깡’ 고문 사건 항의 기자회견

미등록 체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구금된 이주민이 구금 기간 상한에 도달해 풀려나더라도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개정안은 출입국 당국이 풀려난 이주민에게 정기적 보고와 출석, 연락처 제출 등의 조건

을 붙여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1년 6개월을 다시 구금할 수 있다. 또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만 있어도,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재구금할 수 있다. 구금에서 풀려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머물려면 경제 활동은 불가피하다. 결국 구금과 출소를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대신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가 구금 이의신청을 받고 3개월마다 구금 지속 여부를 심사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법무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나마 이 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만 존속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오히려 개악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금된 이주민의 “출국 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 당국이]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국하지 않으려는 구금 이주민을 강제로 쫓아낼 근거를 만든 것이다.

난민의 경우 난민법의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난민이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컨대 난민 중에는 한국의 난민 제도가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여러 사정으로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소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직면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 전에 송환해 버릴 수 있다.

이처럼 법무부 개정안은 운동이 거둔 성과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더 억압하려 한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구금된 이주민을 구분해 더 가혹하게 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형법의 내란죄·외환죄·국교에 관한 죄(외국 국기 손상이나 오욕도 해당된다)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첫 1년 6개월의 구금 기한이 지나도 풀어 주지 않고 추가로 1년 6개월 구금을 할 수 있게 한다.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미 치른 상태에서 보호소 구금도 모자라 다른 이주민보다 더 오래 구금하

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들은 모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이다. 이런 법률로 처벌받은 이주민을 보호소에 더 오래 구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주민의 정치 활동을 억압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자 합법화 요구와 고용허가제 반대,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반대를 ‘반한’(反韓) 활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1997년에 한국에서 추방당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알고 보니 알카

에다 조직원이었다는 식으로 테러와 연결시키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시점으로 봤을 때, 정치 난민들이 참가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었다. 정치 난민 중에는 자국 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 적잖이 있다.

이런 이주민들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가 1년 6개월을 버티고 다시 풀려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집트 현지에서 전한다

정권 향한 원성이 “절박하고 분노에 차 있다”

가자지구에서의 학살과 이집트 내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집트인들이 엘시시 정부에 맞서 떨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필립 마플릿이 수도 카이로에서 전한다.

이집트 지배자 압델 파타 엘시시의 인기가 지금처럼 떨어진 적은 없었다. 엘시시 정부는 군경과 공안기구로 대중을 잔혹하게 억압하는 것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

수년 동안 엘시시는 이집트 국가기구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동맹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 동맹들은 엘시시에게 지원과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이 투자와 대출은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지원과 투자는 가자지구의 위기가 엘시시의 철권 통치를 위협하고, 그의 전임자를 제거했던 2011년 혁명 같은 반란을 촉발할까 봐 우려하는 것의 표현이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전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를 몇 주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끌어내렸다. 오늘날 엘시시가 그러하듯이 무바라크도 구속과 고문, 투옥을 앞세운 통치 방식에 기댔었다.

당시의 반란은 혁명으로 발전해 이집트 전역으로 번졌고, 나아가 아랍 세계 전역과 그 너머에까지 충격을 가했다.

2013년에 엘시시는 군부 쿠데타와 뒤이은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서만 대중 운동을 억누를 수 있었다. 그랬던 운동이 부활할 수 있을까?

엘시시의 동맹들은 그럴 수 있다고 겁을 내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경제 위기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시위와 파업을 더 많이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엘시시 정부의 정책은 이집트인 대부분에게 재앙을 안겨 줬다. 물가 인상은 연 40퍼센트에 달하고, 식료품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다.

높은 물가는 특히 이드 기간에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드는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리는 명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명절 음식이나 선물을 장만하지 못했다. 이때가 되면 어린이에게 무료로 기구를 태워 주고 유회를 제공하던 놀이공원들이 올해는 문을 닫고 지나갔다.

2015년에 극빈층 이집트인들은 소득의 4분의 1을 식료품 구입으로 지출했다. 이제는 소득의 절반을 필수 식품 구입에 쓰고 있다.

엘시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서 분노를 샀다. 지난해에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훈수를 뒀다. 비판과 시위는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말이다.

엘시시의 정책 중에는 어처구니없게 허영심 가득한 것들도 있다. 카이로 남동쪽에 위치한 사막에 69조 원을 들여 새로운 수도를 짓는 것도 그중 하나다. 거대한 대통령궁과 새 부처 건물 수십 개가 그 구상에 이미 포함돼 있다.

또한 엘시시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에 새 물길을 만드는 공사도 명령했다. 정부의 수입은 압도적으로 엘시시의 친구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은 이집트의 약탈적 사업가들과 고위 장교들이다.

엘시시는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무바라크를 끌어내렸던 혁명적 운동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권력을 잡았다.

무수한 집회에서 —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있었다 — 수백만 명이 소수만을 부유케 하는 정책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무바라크는 신자유주의적 IMF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추켜세운 인물이었다.

무바라크는 IMF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식료품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유 산업을 팔아 치우고, 1950~1960년대에 빈농에게 땅을 경작할 권리를 준 개혁을 되돌렸다.

민간 소유주들이 옛 토지를 되찾으면서 빈농 가족 수백만 명이 땅을 떠나야 했다. 이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주변 빈민촌에

산다.

또 다른 일

부는 이주민

으로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

는 위험천만한 여행

길에 오른다.

유럽연합 지배자들

은 엘시시가 계속 권

력을 쥐고, 또 이집

트 등 중동 나라들

에서 출발하는 이

주민들을 붙잡아 두길 바란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압력이 워낙 큰 탓에 엘시시 정부는 임금 문제에서 형식적인 양보를 해야만 했다. 이번 달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71퍼센트 인상해 월 6000이집트파운드(약 17만 원)로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업체의 97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하고 관련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2월에 벌어진 일련의 파업은 이집트 노동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집트의 가장 큰 작업장인 마할라 알쿠브라 방직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필두로 작업 거부가 벌어져서 부분적으로 승리했다.

이집트의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이렇게 전했다. “2월 24일 노동자 약 7000명이 공장 내 광장을 점거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사장들이 들어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압력으로, 사측은 일주일 안에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사측은 3월부로 연봉을 7퍼센트 인상하고 3월치 월급은 8퍼센트 인상하기로 한 바 있는데, 파업으로 추가 인상을 따낸 것이다.

마할라 공장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이집트 노동운동의 선두주자였다. 마할라 투쟁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행동하면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른 작업장에 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IMF, 유럽연합이 이집트에 제공하는 지원과 투자

한쪽 국경에서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군대로 막고 있다. 이집트인 대부분에게 가자지구 봉쇄는 “이집트의 치욕”을 의미한다.

카이로의 한 활동가는 엘시시 정부의 행태를 보며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람들은 임금과 물가 문제로 절박할 뿐 아니라, 엘시시가 네타냐후의 절친처럼 행동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런 일이 마치 다른 별에서 벌어지는 양 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위를 통해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에 나서는 이들은 바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행동이 카이로의 한 노조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최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시위에서 여성들이 아랍 국가들의 배신을 꼬집으며 이렇게 외쳤다. “오, 비겁한 아랍 정부들이여, 가자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무자비한 탄압에 의존하겠다는 정권의 생존 전략은 엘시시에게 술한 위험을 안겨 준다. 2013년에 그는 이집트의 주요 야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을 공격해서 파괴했다.

엘시시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대신 노골적인 조작과 개표 부정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가와 민중 사이에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 전에는 무슬림형제단이 수십 년간 그런 구실을 했다 — 엘시시 정부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특히 취약하다.

엘시시의 국제적 친구들은 2011년에 파라오를 한 명 잃었고 그런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국경에 접한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네타냐후와 그의 인종 학살 정부가 가장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 노동계급이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쫓아다니는 것이다.

출처 Phil Marfleet, ‘Egyptian people are ‘desperate and furious’ at repressive regime’ (2024. 4. 24) / 번역 김중환



는 국
가들과 자
본가들이 이집
트에서 부활한 대
중 투쟁을 엘시시
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심각하
게 우려함을 보
여 준다.
가 자 지 구 의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와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노동법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과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요구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서 이 요구들을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합법적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해 지금껏 불법 쟁의로 내몰렸던 투쟁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게 핵심 취지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22년 점거파업을 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들에 대한 470억 손해 청구는 조선소 주인이 한화오션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유일 원내 좌파 정당인 진보당의 원들도 새 국회 첫 입법 과제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꼽고 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관공서공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그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걱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시급히 꼭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297만 7593명이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5명 미만 비중은 17.6퍼센트가” 될 정도로 많다. <<매일노동뉴스>> 2023년 11월 24일자)

민주노총 같은 조직 노동운동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며 싸운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퍼센트다.

복원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한다. 민주당은 재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 삭감을 강요했다. 정의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핵심 조항들(손배의 청구 제한과 노조원 개인 부과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조차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면 후퇴안은 복원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에서 유급공휴일 적용만을 제시했고, 보수적 법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용자에게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에 대한 인정률이 매우 낮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 적용을 총선 공약에서 제시했지만 법을 위반한 영세 사업장 사용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중앙일보>> 4월 2일자)

형사 처벌의 강제력이 있어도 사용자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데, 그 강제력조차 없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착취를 더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에는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개혁 입법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의 총선 참패라는 유리한 국면을 활용해, 국회 내 협상에 의존하지 말고, 법 개정만이 아니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건설해야 한다.

김광일

▶ 16면에서 이어짐

총선 결과 이용해 치고 나간 삼성전자 노동자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4월 17일 전국삼성전자노조원 2000여 명은 사측의 비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연구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성과급 제도 개선, 유급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도 노조를 무시하고 노

사협의회를 통해 5.1퍼센트 임금 인상을 공지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초과이익성과급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삼성전자 임원들의 퇴직금은 넉넉하게 챙겨 주고, 보수한도(등기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상한액)도 17퍼센트나 인상했다.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86.3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이번 단체행동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고통을 전가해 온 삼성전자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출이다.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한 것도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만여 명이던 조합원 수는 올해 들어서만 1만 7900명가량으로 늘었다. 지난 보름 사이에 약 1700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벌어진 행동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 그리고 상징적)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체 노동운동에도 뜻깊은 전진이다.

삼성전자노조는 2차 단체행동을 5월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전국 사업장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 실질임금 감소 임금 인상 투쟁이 중요하다

신정환

지난해와 올해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압도적으로 임금 인상이다(직장잡질119 발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2022년 -0.2퍼센트, 2023년 -1.1퍼센트)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5.2퍼센트, 2023년 3.6퍼센트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상승률이 3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물가 상승률이 5.5퍼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노동계급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심각하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늘어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은 고물가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계속 전가하려 혈안이다.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은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에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마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 정도 지원으로는 물가 상승을 벌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사용자들도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려 한다. 3월 24일 경총은 회원사들에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도 강조했다.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직무·성과급을 도입·확대하려 한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눌러서, 임금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차단(일반적인 임금 억제)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고임금·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키운다고 비난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저



김미리 기자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발휘해 싸워야 한다

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도 악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저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지난해 늦여름 벌어진 교사들의 대중 운동은 단호하게 싸우면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집단적 힘

총선 패배에도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그러나 분노가 자동으로 투쟁을 낳는 건 아니다. 싸울 자신이 있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졌고, 그 책임을 돌려싸고 내분해 있다. 윤석열 지지율은 기궤해야 30퍼센트대 수준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총선 직후 자신 있게 첫 단체행



김미리 기자

집권당의 총선 참패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있다

동에 나섰다.(삼성전자 투쟁은 15면 기사를 보시오.)

물론 노동자들은 불안함도 있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고, 그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들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이 노동자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그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연수회담에 적극 참석한 것은 윤석

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협조하며, 반정부 정서를 혼란시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진보당,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연수회담 환영 논평을 낸 것은 이 점에서 부적절했다.

정부가 위기를 수습하고 반격 준비를 갖추 시간을 줬선 안 된다. 집권당이 위기인 지금이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설 좋은 타이밍이다.

▶ 15면으로 이어짐